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1회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1회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개 요

-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15:00 ~ 18:00
- 장소 : 국회본청 3층 귀빈식당

■ 식 순

[식전행사]		사회 : 백혜련 (국회의원, 강령정책분과 위원)
내용	비고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김종인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토 론 회]		좌장 : 민홍철 (국회의원, 강령정책분과 위원장)
[제1부] 기조연설		
기조연설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 교육·사회 혁신, 남북통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제2부] 전문가토론회		
발제 1	비전과 가치(1): 문명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시사점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발제 2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1회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기조연설

-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 교육·사회 혁신, 남북통일 ----- 01
정윤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 발제 1

- 비전과 가치(1): 문명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시사점 ----- 25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 발제 2

-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 43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문 1

-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 63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 토론문 2

- 시대정신의 흐름과 전망 ----- 69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조연설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 교육·사회 혁신, 남북통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 교육·사회 혁신, 남북통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I.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 한국의 현실과 과제

1.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빠른 산업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성공은 미완의 성공이다. 아직 우리에게서 통일의 성취와 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전을 요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복잡한 구도가 전개되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와 대면하고 있다. 분단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비정상’이 사회의 각 영역에 작동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데 정치는 국민통합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지 오래다. 품격의 타락과 도덕의 해이는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경제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지만 각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우쭐했다. 그러나 곧이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다. 그 후 비록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도 위기의 적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상시적으로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과도

한 유연화는 그나마 직장을 가진 사람마저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업윤리를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은 정치적·형식적 민주화에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본' 통치를 구현하고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로 요원함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저변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 정신이 살아 있다. 그러한 윤리의식이 이성적으로 승화되어 공동체의 윤리로 성숙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시적 위기상황에 내몰려 계속 표류할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 한국경제의 명암

일류국가가 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국력을 내실 있게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문에서 한국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밝은 면을 보자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세계 7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다.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다. 1980년대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현대·LG·SK 등 4대재벌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이처럼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던 표현인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심히 우려된다.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한다. 먼저 한국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부터 보자.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강조가 핵심적이었다. 주요 천연 자원도, 축적된 자본도 없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

는 데 지극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오랜 전통이다. 그런 열의가 모여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발전의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과감한 도전정신이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일함으로써 현지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또한 발전시켰다. 그렇게 서독과 열사의 땅 중동에서 광부, 간호사, 건설노동자로 일하며 받은 돈으로 형제, 자매,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헌신적 노력이 더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생겨났다. 희망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며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면은 어디서 유래할까?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선성장·후분배에 입각한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다. 수출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 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문과 기업 부문이 각기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 결과,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사회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핵심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말 현재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내수가 줄어드니,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크다. 이때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로 인해 산업간 연관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

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은 지금까지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후분배의 관성 또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II.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 동반성장

1.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50 그리고 빈자에게 50 분배되었다고 하자.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종전의 55 대 55에서 54 대 56 또는 53 대 57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빈자 모두 다 성장의 과실을 얻게 하되 빈자의 증분이 부자의 증분보다 크게 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뿐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2. 동반성장의 원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 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오히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재벌개혁, 즉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며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3.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는 우선, 초과이익공유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적인 것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이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책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당장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을 아래에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용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아주 많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이 숙련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더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

이러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성장이 촉진되고 지속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제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50-30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국가신용도는 일본·중국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하여 잠재성장력이 떨어졌다.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 따라서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첨단, 핵심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것은 중기적으로 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하여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 단기적 성장을 이루면서 지속 성장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둘째, 동반성장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경제적 효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도 확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영 이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성공하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이다.

5. 동반성장, 공정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선진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했다. ‘대전환: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형성’이란 주제로 개최된 2012년 다보스포럼이 대표적 행사다. 이때 참석자들이 ‘사회적 공정성과 불평등 해소를 등한시 한 것’을 반성하자(새런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언론은 ‘다보스 포럼이 자본주의를 버렸다’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모델은 만들어졌을까? 국가별로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새로운 대체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중들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에 대한 반감과 해소열망은 더욱 거세졌다. 서구 각국의 선거에서 민족주의, 배타주의를 자극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의 우파포퓰리스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현상’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어떨까? 서민 가계의 안정을 가져올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었을까?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정책가치’ 또는 ‘정치철학’으로 ‘체화(體化)하지 않은 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기에 선거 이후 정치민주화는 실종되었다. 그러다 최근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재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야권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제시되었고, 여기에 ‘공정성장’이 대안모델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제민주화, 공정성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

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러나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이들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본질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작은정부, 효율성,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이다. 이들 특징을 관통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이며, 자유경쟁을 확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유’와 ‘경쟁’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였던 중상주의 경제질서를 모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케 한 자본주의 출현의 촉발제였다. 그리고 슈페터의 지적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질서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인 혁신적 기업가가 끊임없이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영양분이다.

그런데 ‘자유’와 ‘경쟁’을 ‘무한’하게 확장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없어질지 수도 있다(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는 고백으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애덤스미스가 갈파했던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정신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실현하는 자유와 경쟁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하여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케 한다. 반면 공정한 관찰자가 사라지고 자유경쟁만 남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없이 오직 개인의 이익추구만을 목표로 함으로서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은 한계를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재벌독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경쟁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성장 정책이 공정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 공정경쟁을 유도하더라도 역동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경쟁에 공동체와 인간에 대한 고려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시장 탈락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축적되면 또 다시 ‘경제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공정성장 정책이 국내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산업재편을 추진한다는 방향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자유’시장체제에서 기업의 확장 속성을 간과하고, 개방화·세계화된 한국시장에 다국적 대기업의 한국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이득임을 보여주는 게임이론의 죄수딜레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류사와 경제분야의 많은 연구는 경쟁보다 협력할 때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는 함께 협력하여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

다. 그것이 공동체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과 오늘날 서민가계의 불안을 극복하는, 경제 재도약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1. 교육 혁신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적 힘을 키워야 한다. 오래전 영국에서 연구하던 시절 이튼 칼리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추운 겨울임에도 이튼 칼리지 학생들에게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혀 차가운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던 강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이게 우리가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는 방식이다. 19세기 총리들은 대부분 이튼 졸업생들이었다. 하나같이 키 크고 강한 사나이들로, 빅토리아 여왕 재위 기간에 대영제국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자 약해 빠진 이들이 총리로 선출돼서 대영제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야 했다.” 그 강사가 농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의 말 일부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우리말도 있지 않은가.

또한, 창의력은 육체적 힘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 교육이 새로운 세대에 함양해야 하는 특성이다.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일컫는 창의력은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연구개발은 최첨단 투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이다.

나는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여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낮췄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한국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 실제로 한국에는 현재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60개의 2년제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은 전체 인구의 4%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교육에 필요한 개혁중 하나는 바로 대학의 숫자와 그 규모를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질 중심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대학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험에 익숙한 사람만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입생의 1/3은 전국에서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제도는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도록 보장한다.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폭넓은 간접경험이다. 대학이 지식의 창조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낮은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융통성을 겸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자신감과 융통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길러줄 만큼 양호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다. 특히 모국어는 도목수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연장통과도 같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명료한 사고는 설득력 있는 추론을 가능케 해주며, 추론이 모여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사상체계가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 없이는 그 어느 사회도 일류 제도를 구비하고 번창할 수 없다. 언어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 졸업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읽고, 말하고, 써야 한다.

끝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임을 항상 새겨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묻는 일과 유리된 지식은 한번 써먹고 마는 소모품과 다를 바 없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필경 남에게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며, 결코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가 될 수 없다.

2. 사회 혁신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든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맨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세월호 사태 등 빈발하는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끝간 데 없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의 구조였다. 돈 먹는 공무원, 돈 주는 기업인,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계와 학계, 정의에 눈 감은 사법부,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그리고 영리 추구의 온상으로 변한 교육계, 우리 사회의 솔직한 단면이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이 구조가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강한 자를 위해 불의에 눈감게 한다. 한 때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던 ‘보다 나은 미래, 더 잘사는 사회’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 비상구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맞선시장에서도 환영받지만, 가진 것이 개인의 능력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다. 결혼도, 취업도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그들이 좌절하고 병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병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깨야 한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파리를 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정치권을 떠올린다. 그런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부패의 문제에 과연 정치권이 가장 선두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오히려 정치권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까 염려스럽다.

교육계나 법조계는 부정부패로부터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학 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고, 몇몇 대형 로펌은 재벌 못지않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지 오래다.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은 가장 권위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 들어가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몇 십억 원의 돈을 번다. 여기에 개혁의 칼날을 세웠던 정권은 모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산하단체를 관리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권을 챙겨 주고, 퇴직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이제 너무나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은 우연히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

IV. 어디로 갈 것인가? :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

1. 과정으로서의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통일의 초석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관련 메시지를 쏟아냈고, ‘한반도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통일 구상도 내놓았다. 2014년에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에 대해 국제여론은 비교적 냉담하다. 국제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한반도 안정과 북핵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거나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돌출적이고 변덕스러운 북한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의 성찬에 비하면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 이유는 통일의 결과만 강조할 뿐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독일 통일이 좋은 사례다. 서독은 1969년에 시작된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진보나 보수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20년 동안 일관하게 추진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

가.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

(1) 5·24 조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같은 해 5월 24일 대북 제재를 가했다. 당시 조치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 이루어졌다. 남북 간의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 강력한 조치였다.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 공품 반입 허용,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일부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도 유지되는데,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또한,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5·24조치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 개성공단 폐쇄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었다.

중단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에는 경제·핵병진노선을 천명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같은해 3월에 실시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측 기업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불허하고, 5만 3천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남측 주재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개성공단은 중단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그후 남북 당국이 여러차례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5개월여 만에 개성공단은 정상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된다.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의 하나로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다. 북한 역시 2월 11일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했다. 또한 개성공단내의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맞서 남측 정부도 같은 날 개성공단의 전력 등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이유도 충분하고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기화와 로켓 발사 성공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다. 정부로서는 북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들의 볼모 가능성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비로의 전용된다는 게 그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개성공단 건설 합의서가 체결되었던 2000년부터 반대론자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임금 전용'은 증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고백했다. 그러므로 중단 이유는 '볼모론' 하나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볼모론' 하나로도 개성공단 폐쇄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북한군이 전진 배치되면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되어 위협이 커진다는 평가다.

이렇게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지대'이자 안전판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 공단만은 폐쇄하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가 결합한 최초의 ‘한국형 통일모델’이었다. 자본 및 기술에 강점이 있는 남한과 토지와 노동력을 가진 북한이 결합해 상호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정부의 중단조치 직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성공단 폐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자본·경상·재정수지가 훼손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남북근로자 사이 소통의 장이자,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매개체였다. 동독 출신 오스트리아 빈(Vienna)대학교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독일 통일 전 동독인이 서독인을 접촉하는 경험은 물론이고 그냥 바라보는 경험만으로도 동독 체제에 매우 파괴적”이었다며 “개성공단은 거대한 남한측 선전기구”였다고 했다. 그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은 “남쪽이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자체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면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야 한다. 경제는 물론 안보의 관점에서도 폐쇄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나. 통일의 선행과제

통일이 우리민족 최대 과업인 것은 맞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 풀어야 할 쟁점이 있고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를 배격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당국 간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던지는 대북제안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식·비공식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 당국이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물론 다반사로 합의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변화만을 마냥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또한 기존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고,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이래 지속되어온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때가 되었다. 또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켜야 한다.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반복하게 된 근본 원인은 모든 것이 정치·군사 분야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교류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스포츠, 학술 등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교류 주체나 목적도 다양하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교류 분야나 목적, 주체를 불문하고 모두가 정치·군사 영역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합의는 보류되거나 무시되기 일쑤다. 결국, 남북은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축적한 분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통일의 발걸음은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국제정치사는 적대적 국가들의 관계 개선은 민간영역에서의 자유롭고 장기간에 걸친 교류로부터 정치·군사 영역으로의 확장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냉전 시대 미·중간 핑퐁외교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이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를 통해 국교 정상화의 물꼬를 터 지금의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처럼 같은 민족으로서 전쟁 경험이 있고 체제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체제와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경제협력관계를 일관하게 추진하여 양안 간 평화를 구축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취해 왔다.

우리 또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하여 남북한 간에 신뢰를 구축해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일 이전 서독이 실천했던 ‘분단관리체제’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단구조에서 동서독 관계의 원칙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공존이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맹목적인 통일보다는 “분단되어 있으면서도 통일된 효과를 누리자”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이념 대립이 심했던 냉전 시기에도 서독은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통일에 꼭 필요한 인적·물적 교류에 힘썼다.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 서로 얻는 실익이 커 성공확률도 높다. 그렇다고 대북 경제재제 조치를 당장 모두 해제할 수는 없다. 여론과 조건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민간부분의 ‘작은 사업’부터 물꼬를 터가며,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통합과 통일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 결과로 보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썩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깊게 뿌리박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은 70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다른 이념으로 살아왔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정도로 심리적 간극은 크다.

경제력의 차이는 또 어떤가? 2013년 기준 국민총소득(명목GNI)이 남한은 1,441조 1천억 원, 북한이 33조 8,440억 원으로 42배 차이가 난다. 이대로 두면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격차가 커질수록 통일비용 역시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남한 국민의 몫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정치, 문화, 복지 등 사회운영시스템은 통일 전과 후 북한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일을 이루는 수단은 ‘평화’와 ‘전쟁’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 서독체제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최종선택을 받아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통일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과연 북한 주민이 남한체제를 ‘통일의 체제’로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북한체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지만, 오늘의 한국사회가 통일 한국의 미래라는 질문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 관용과 연대보다는 차별과 배제가 우선하며 무리지어 편 가르기가 일상화된 사회다. 균형과 공정은 무시되고 그 자리에 독점과 편법이 자리하고 있다. 공들인 경제는 활력을 잃고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는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한국사회는 지금 매우 유동적이며 혼란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냉전 시대의 낡은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패권주의 엘리트정치가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12년 대선에서 여야의 유력후보 모두가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만큼 국민통합이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라는 방증이다.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갈등이 정치의제를 넘어 모든 의제로 확대되고,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기저에 승자독식으로 인한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양극화는 이미 경제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되고 있다. 이 양극화에 대한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통합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국민통합은 통일을 추진하는데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하며, 패배

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야 남한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혼란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또한,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남한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커진다.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내면에는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경제가 성장하여 남한과의 격차가 완화되는 길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협력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길이기도 하다.

경제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이다. 경제체제가 변화하면 정치체제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체제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경제력 격차 해소용 남북경협은 앞에서 언급한 ‘통일기반 조성용 남북경협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세습권력은 정치·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문제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더불어 외부의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든 자본주의 시장경제든 저개발경제에서의 성장은 자본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 중국, 러시아 외에는 없다. 이중 러시아는 경제적 여력을 볼 때 한계가 있고, 중국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접경지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결국, 북한 내륙지역의 개발구까지 관심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경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가 바로 5·24조치 이후 5년째 중단된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다.

남북한 간 경제사업을 통해, 풍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개발할 곳은 많은데 돈과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 흘러가게 하여 남북경제를 동반성장 시키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3. 남북경제 동반성장과 통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현재의 남한 경제력으로는 사실상 북한을 감당하기 어렵다.

통일연구원 김규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약 38% 수준이었다.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으로도 독일은 통일 후 심각한 경기 침체와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5%도 안 된다. 현재의 남북한 격차는 동서독보다 심하고 남한 경제는 당시의 서독보다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력을 동반성장 시키는 과정이 먼저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결국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한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경제의 교류협력이 중단된 이후 남북교역액은 2014년 23억 400달러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99.8%를 개성공단이 차지한다.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전부터 개성공단은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로 꼽혀왔다. 정치적 혹은 사업적인 이유로 다른 경제교역 사업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처지에서도 쉽사리 중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중요했던 이유는 교역을 통한 이익 외에도 개성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상호보완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에는 인력의 교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되 가급적 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나아가 제2, 3의 개성공단을 북한에 지속해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이 없는 북한 내륙도 좋은 방안이다. 또 남한의 공단에 북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통일 경제의 시금석이다.

동반성장형 남북경제협력은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그것이다.

먼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남한-북한-중국, 남한-북한-러시아, 또는 남한-북한-중국-러시아가 함께하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나진(북한), 하산(러시아), 훈춘(중국) 삼각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은 동해에 물류 항구를 원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하며,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활발한 진행이 예상된다. 여기에 남한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프로젝트도 동북아시아 동반성장 경제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고(故) 김석철 명지대 교수가 제안한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건설도 시사점이 크다. 중국

과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고, 개성과 달리 북한 전속 구역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적다. 두만강 하구를 동북아의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북 협력과 주변국의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경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변화와 관계 없이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경협에 참여한 남한 기업은 피해를 보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은 통일 한국에서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견인한다. 현재와 같은 고립상태의 북한 경제체제로는 어떠한 발전도 끌어낼 수 없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간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교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을 정치의 예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은 항상 정쟁의 소재가 되어 이념 갈등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경제력 차이가 뚜렷한 지금, 통일에 대한 방향성은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가 기본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남북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 정치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신뢰의 통로를 만들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정치·군사 분야보다 유연하게 풀 수 있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이 전부가 아니다. 지속적인 교역증대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교역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남북교역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상호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양측은 서로 실익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남한은 북한생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북한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영역의 구분을 통해 특화된 개발이 가능하다. 북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해당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산업과 연계성을 강화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셋째는 상호신뢰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항상 돌발적으로 급변해서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나 돌출적이고 급변한다. 그런 이유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이 항상 정치·군사적 상황에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정치와 분리하여 정권이나 조성된 정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

분단의 세월이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남한은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쟁취하며 세계 일류국가에 근접했지만 북은 '유일 수령세습체제'와 절대빈곤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이 사안에 따라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남한이 과거 70년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의 과제와 직면한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통일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려면 경제력이 있고 민주주의를 하는 남한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고한 비전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 대북정책은 정권의 성격이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했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고 대북 포용정책 또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강경과 포용이 모두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양자 모두가 '주관적 희망'에 기댔기 때문이다. '햇볕'이나 '바람'이나의 차이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이미 실패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 그런 일도양단 식의 단순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에 맞는 '변화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일정책은 기존의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다. 냉전적 사고, 민족주의 감성에 기댄 통일논의나 대북정책은 돌출적이고 변덕스러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수 없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치의 주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먼저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 정치가 마음대로 경제를 예측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통일기반 조성용 경제협력사업'만큼은 일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추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체제와 이념, 민

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상생공영이라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통일논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은 상당한 혼란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준비 단계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남한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 부담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에도 상당한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 우리가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잘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비전과 가치(1): 문명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시사점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비전과 가치(1): 문명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시사점¹⁾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문제의식: 미국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문명 전환기 선거〉

"정치적이란 모든 것이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와 설득으로 결정되는 것"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 세계로 편입시킨다." 정치적 행위로 "이전에
무엇이든 발생했던 것에서 기대하기 힘든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항상 시작된다."
정치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기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 기적, 혹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샌더스, 트럼프 현상 등에 대해 미국 지식인들은 수 없이 예측이 틀리거나 혹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음. 2012년 족집게 예측으로 전설이 된 네이트 실버 여론조사가는 최근 트럼프 현상의 강고함에 대한 예측에서 실패를 자인함. 또한 미국의 새로운 진보주의 시대를 스탠리 그린버그 민주당 전략가가 신간(America Ascendent)에서 선언하자마자 반동적인 트럼프 현상이 강력히 강타함. 후쿠야마가 미국의 심각한 퇴조를 선언하였다가 샌더스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최근 입장을 수정함
- 과거 부시 2세 시절 미국 민주당 집권 아젠다를 담은 람 이매뉴얼 전 비서실장과 부르스리드 전 백악관 국내 정책특보의 〈플랜〉은 당시로서는 탁월한 가치와 정책 패키지임. 하지만 다가오는 2008년 경제 대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결여된 심각한 내용적 결함을 가지는데 이번 대선 힐러리 진영 및 지식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과거 〈플랜〉보다 더 큰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짐

1) 이 발표문은 이후 본인의 7월 출간 예정인 단행본을 위한 메모이므로 저자와의 협의 없는 인용과 공유를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발제문은 시간 부족과 지면상 간단히 이번 미국 대선의 추상적 시대정신과 시사점을 다룸,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초 출간 예정인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메디치 출판사)를 참조할 것. 이후 한국의 대선 시대정신, 가치와 공약은 미국 대선의 구체적 정책 아젠다 분석 및 저성장기 한국의 독특한 특성, 시민들의 감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필요성.
- 한마디로 이 발표문의 단순한 결론은 미국으로부터 배워야할 핵심 시사점은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기이며 불확실성의 시기이기에 기존 교과서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겸허하게 시민들의 새로운 가치와 문제의식으로부터 우선 배워야 한다는 것, 때로는 과감하고 급진적 태도를 수용해야한다는 것임
- 미국은 오늘날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동요 상황에 빠짐.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의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미국에서 백인 중년층(특히 저학력층)의 사망률이 의료기술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국 중 유일한 예외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340명이던 히스패닉 계의 중년 남성은 사망률이 20% 넘게 하락한 반면에 그 해 360명 정도이던 백인 남성은 10%가 넘게 사망률이 증가함. 디턴 교수 및 그와 함께 토론자로 나온 글로벌 스타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놀라운 사망률 증가 추세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직전의 정신적 공황과 사망률 추세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표현하기조차 함.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배설하는 듯 보이는 트럼프 막말과 그 돌풍의 이면에는 기존 백인 중심 사회의 가치의 황혼기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강한 절망감이 녹아있음.
- 오늘날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미국은 백인 사망률이 급증하고 파시스트와 유사한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라는 기이한 괴물까지 만들어 낸 걸까? 미국의 이례적인 백인 사망률 증가나 극단적인 트럼프 현상은 미국이 붕괴의 길로 가는 징후일까? 이 붕괴란 경제적 삶의 격차와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에서 오는 걸까? 소비에트의 몰락 시기처럼 단지 경제적 절망감만이 아닌 정신세계 전반의 붕괴 신호일까? 공화당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오바마의 우파적 의료보험 개혁조차 ‘빨갱이’로 몰리는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자 샌더스의 돌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구나 트럼프와 같은 보수 포퓰리즘의 반격이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어떻게 좌파 샌더스의 바람이 공존할 수 있을까? 혹시 이 기적 같은 현상들은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도 중요한 징후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발표자의 시각에는 지금 미국은 수십년간 계속된 레이건 보수주의 질서(심지어 클린턴 리버럴 시대는 보수주의 질서 속의 리버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질서로 이행 중에

- 그 성격 규정을 놓고 다양한 층위에서 가치와 비전의 대충돌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 발표자는 지금을 퇴조기 미국의 정치 교착 상태로 규정하는 후쿠야마 교수의 디스토피아나 혹은 신진보주의 시대로 규정하는 스탠리 그린버그 전략가의 유토피아식 단순한 테제에 동의하지 않음. 한국인들의 이해를 위해 다소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 오늘날 미국은 건국 이후의 기존 근대 문명의 주체 세력과 이들의 패러다임이 황혼을 맞이하고 있고, 반대로 탈근대 문명의 주체 세력과 패러다임이 상승하고 있음. 이는 후쿠야마의 디스토피아(미국 퇴조론)나 그린버그의 유토피아(미국 상승론)처럼 어느 한쪽이 이미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 미래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이행기의 치열한 전투임.
 -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 오바마의 부활, 힐러리의 고난을 둘러싼 분석들은 단순히 정세 평가를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이란 안경을 속에서 조명을 해야만 풍부한 이해와 정확한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오늘날 트럼프, 샌더스, 오바마, 힐러리간의 쟁투는 단지 이민이나 경제 불평등을 둘러싼 투쟁이나 공화 대 민주의 정당 일체감 투쟁의 시야를 넘어섬. 더 나아가 이는 전혀 다른 세계관, 주체, 시대적 감수성, 삶의 스타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문명 전환기의 투쟁임. 트럼프나 그를 주로 지지하는 백인 중년 남성층, 그리고 기존 사회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은 이 근대 문명 초기의 주인이었고 지금 퇴조해가는 근대 산업주의 문명의 최후 단계에서 나오는 절망적이고 복고적이며 스스로도 혼란스런 포퓰리즘 운동임.
 - 굳이 트럼프와 그 지지자 층의 정책 지향성에 일관성을 찾자면 기존 공화당의 삼두마차인 문화적 보수주의와 시장주의, 국제 개입주의 톤과 다소 구별되는 소위 ‘레드넥(red neck, 땀별에 별게진 뒷목에서 유래한 말로, 남부의 하층 백인 노동자층을 경멸적으로 가리킴) 보수주의’임. 이 레드넥 보수주의의 핵심 애티튜드는 잘 나가는 인사이드더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삶의 기반에 대한 불안감임. 트럼프도 물론 낙태 등에서 문화적 보수주의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처럼 이를 절대적 성전으로까지 승격시키지는 않음.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엘리트들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적의감이 이들을 묶는 공통의 기반임. 주로 관심은 히스패닉 등 새로운 이민자층 및 국제 무역 협정이 야기한다고 믿는 기존 전통 가치와 일자리의 상실, 미래 전망 불투명에 대한 분노임. 트럼프 지지자들은 단지 비유적 표현으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원함. 북미자유무역 협정은 물론이고 한태평양 공동체 협정, 파리기후 협약 등 최근 미국이 맺는 모든 국제조약은 소수 엘리트들만을 위한 조약으로 간주함. 그리고 다른 나라 지원 및 지구적 질서 형성에 에너지를 쓰느라 자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된다고 믿는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매우 강함.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을 무임승차의 대표적 국가로 낙인을 찍음. 그리고 중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냉전의 적으로 간주됨.

- 샌더스는 근대 진보주의 황금기에 대한 복고적인 샌더스의 꿈과 새천년 세대의 미래의 가치가 결합된 과거와 미래의 전략적 연합임. 과거 공화주의적(시민공동체에 대한 사랑) 성향의 사회주의자 유젠 텡스의 걸출한 계급운동의 21세기 부활임
- 미국의 새로이 상승하는 세력인 오바마, 힐러리, 그리고 스페이스 X 의 앨런 머스크 회장 등의 기업 세력은 근대를 넘어 미국을 미래 기업국가로 진화하고자 하는 신진보주의 운동임. 이들은 상승하는 세력인 새천년 세대 및 진보적 백인, 히스패닉 등 문화 인종(ethnic) 간 다원주의 연합의 미래 세력을 대변하며 미국의 헤게모니를 가지고자 함. 이 전투에서 상승하는 진영을 대표하는 힐러리 대통령은 오바마에 이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주도하는 '생태적 기업국가'로 미국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임. 지구행성의 보존을 추구하는 생태와 부단한 팽창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언뜻 보면 모순적 단어의 결합처럼 보임. 하지만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동력을 얻는 마지막 생존의 형태는 생태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임. 생태적이란 힐러리 대통령의 시대가 기존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지속가능성, 지구행성적 시야, 네트워크 등의 미래 가치와 성장동력이 미국 사회 전반의 작동원리로 뿌리내린다는 의미임. 기업국가란 이 새로운 미래가치의 국가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철저히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이들이 지구적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임. 이 기업국가는 전 지구적 범위의 제국으로서 보다 더 인간적이고 급진적 미래를 위해 샌더스를 지지한 새천년 세대 및 사회운동의 부단한 도전을 받으며 이에 응전하면서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임. 향후에는 이 기업국가의 위협성에 대항하는 정보 자유 운동 등이 미국 및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임. 한국에서도 테러방지법 이슈는 기존 민주화 운동의 감각을 넘어서는 21세기적 이슈임.
- 과연 오바마에 이어 힐러리가 추진할 생태적 기업국가라는 미래를 넘어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지평의 문명대로 중장기적으로 진화할 지는 아직 미지수임. 과거 사회주의 붕괴를 정확히 예견한 월러스타인 등 일부 석학들은 2050년 경 50%의 확률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예고하였고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에 인용된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 대 과학사 교수는 2073년 경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구적 대붕괴를 예고하기도 함. 몇 년 전 작고한 위대한 문명비평가인 토마스 배리는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벗어난 새로운 문명을 생태대(Ecozoic era)라 이름 붙임. 그가 보기에 기술주의가 득세하는 지금

은 기존 근대문명의 마지막 황혼기 발악에 불과함. 이행기 이후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주체들간의 투쟁의 결과로 열려있음. 미국의 미래 주인 자리를 둘러싼 전투와 수렴의 과정에서 오바마 시대 이후 미국의 문명의 색깔과 진로가 결정될 것임.

- 샌더스와 트럼프 현상의 씨앗은 물론 미국 정치와 경제의 극단적 양극화가 이 강력한 포퓰리스트들을 만들어 낸 환경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이 환경이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과 함께 이해할 때 오늘날의 이 이례적 현상들은 더 잘 이해될 수 있음. 우선 이는 미국 리버럴들의 오랜 소수파 정당 신세를 종료하고 대통령직 정권 교체에 대한 집착이 야기한 중도주의 전략의 필연적 부작용임. 금융자본주의 틀에의 순응, 진보 이념의 중도화, 전 지구적 제국 경찰의 길은 곧 서민 백인층을 중심으로 계급적 좌절감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음. 이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 등 보수 포퓰리즘의 강력한 동력이 됨. 동시에 공화당 측은 킵 커치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대한 집착 속에서 보수 지역의 강경 보수주의 운동의 만개라는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 놓은 결과임. 이 강경 보수주의 통한 지역과 전국 의회 장악은 곧 백악관 장악에서 산토끼를 놓치는 불임 정권으로 귀결

〈신진보주의 가치와 흐름의 도래?〉

- 흔히 제도권 정치 내의 역학 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시야는 정작 그 근저에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토양의 변화, 즉 사회운동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놓치기 쉬움. 전자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오쿠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가, 후자는 도시 포틀랜드가 상징적으로 보여줌.
- 지금 미국은 뉴욕,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의 질과 생태 문명을 향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리고 이 운동의 입법화 성과는 다른 주로 확산되고, 이는 결국 백악관 차원의 입법화의 토대이자 자극제로 작용함. 뉴욕 타임즈 지의 클레어 밀러(Claire Miller)가 “리버럴들이 도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이디어를 확산한다”(Liberals Turn to Cities to Pass Laws and Spread Ideas) 라는 글에서 잘 포착한 것처럼 오늘날 신진보주의 흐름은 도시로부터 연방정부로 확산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
- 물론 이 확산의 사이클이 연방정부에 도달했을 때 커다란 임팩트의 법안으로까지 귀결되는

경우는 적음. 왜냐하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강경 보수주의가 주도하는 공화당의 거부권 정치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 이 포위와 교착 상태에서 오바마가 집권 2기 주로 선택한 전술적 돌파구는 의회를 우회하지만 대신에 적용범위가 지극히 제한된 행정명령임. 예를 들어 최저임금 운동의 확산 속에서 그가 겨우 할 수 있었던 성취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외주 업체들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10.10 달러로 인상하게 하는 행정명령임. 더구나 이 적법한 권한 행사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월권이라고 공화당은 사사건건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실정임.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치는 새로이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약속한 오바마의 임기 중에 벌어진 아이러니들을 분노에 찬 어투로 『불평등의 대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함. 예를 들어 금융위기 타개책 이후 오바마 임기 초반 여론조사에서 이미 거의 절반의 미국인이 미국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함. 물론 그래도 당선 직후이기에 개혁의 기대감으로 시민들은 당분간 인내를 선택함. 하지만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던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가 지속되고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기막힌 현실에 시민들은 점차 분노하기 시작함.
- 불공정한 느낌보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그 결과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점임. 상위 1%의 실효 소득세율이 중위 계층보다 낮은 어처구니없는 부정의의 결과로 2002~2007년 기간 동안 상위 1%는 국민소득의 65%를 가져갔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 혜택의 상당수가 이들에게 돌아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오바마 임기 중에 벌어진 일들임. 또한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 추가로 창출된 소득의 93%를 상위 1%가 가져갔고, 반면에 대부분 주택 형태로 부의 비율이 구성된 중위 계층은 2007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자산이 거의 40%나 감소했다고 스티글리치는 고발함.
- 중하층의 현실은 더 기가 막힘. 경제위기 이전 하위 25%의 평균 자산은 마이너스 2300달러였는데, 경제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무려 여섯 배나 하락함. 이 중산층과 하층의 자산 감소가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과 결합하면 가계의 부채가 악화되고 청년층의 미래가 저당 잡히는 사회문제로 비화됨.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립대학교 수업료가 평균 6분의 1배 증가함. 2007~2008년부터 2012~2013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등록금 인상률이 2년제 공립은 104%, 4년제는 74%나 됨. 오바마의 등장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부활하기는커녕 이제 완전히 문이 닫히는 디스토피아가 시작된 것처럼 보임. 마치 영화 〈형제 게임〉의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공간과 나머지 지역에 격리된 다수 서민들의 처절한 생존 게임이 SF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오늘날 미국에 대한 다큐 영화처럼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극적 사건이 발생함

- 물론 토머스 프랭크 등의 지식인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호에서 지적하듯 이 오큐파이 운동은 극우 보수 운동인 티파티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음. 하지만 많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이 이 운동을 그저 일회적인 이벤트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은 큰 오판임. 이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일단을 드러낸 사건임. 알랭 바디유의 “사건의 철학”의 관점이 제기하듯이 사건은 대중들의 마음과 정치적 경험 속에 무시하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행동을 변화시킴. 그리고 시대의 이행은 사건을 매개로 진행됨. 이 오큐파이 운동은 이후 다양한 경제정의 및 정치운동의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운동의 지속적 자장에 대한 이해 없이 오늘날 전 지구적 시대정신을 이해하기란 어려움
-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의 운동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임. 이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과 하층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존의 방어책임. 워싱턴 주의 시택(SeaTac) 시는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을 2013년 15달러로 인상함. 그 이후 시애틀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기업적 성향인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폭스 채널 등 보수 언론의 강력한 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킴. 제도권 안에서 오바마 정부의 이례적으로 치열한 최저임금 인상 노력에는 이러한 전국적 운동의 강력한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음.
- 이 최저임금 운동과 함께 모든 시민의 경제민주화 권리로서 기본소득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는 사실 오래되었고 초당적으로 활발하게 검토되었던 사안이기도 함. 심지어 1970년대 닉슨은 이 경제민주화 운동을 집권 후 어젠다로 일부 수용하여 야권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자 한 적도 있을 만큼 보수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사안임. 오늘날 오바마 시대는 이 기본소득 운동이 다시 비중 있게 무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음. 즉 오바마 시대에 더욱 가속화되는 인공지능 혁명은 중간층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에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생존의 보장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음. 뉴욕타임즈 2016년 1월 10일자는 2013년 옥스퍼드대 연구를 인용하며 향후 겨우 20년 내에 미국의 일자리의 반을 컴퓨터가 대체할 전망이라고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자 실리콘 벨리 등을 중심으로 기본 소득을 주창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명한 차량 공유 운동인 집카(Zipcar)의 창업자인 로빈 체이스 등 많은 창업가나 투자자들이 기본 소득 운동을 주창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얼마 전 다음의 창업자였던 이재웅 소풍 대표가 기본소득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함. 향후 오바마 이후 진보주의 시대가 지속된다면 최저임금과 아

올려 기본소득 이슈는 진보진영의 중요한 전장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지식인들의 편견과 달리 오쿠파이 운동은 결코 일시적인 잔치가 아니었음. 결국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2015년 오쿠파이 화이트하우스 정치혁명으로 전화됨. 이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아니라 파견자로 그간 수십 년간 시장사회에 맞장을 떠온 사회주의자 샌더스 의원을 선택함. 청년들은 이 중산층과 하층의 자산 악화, 등록금 인상 등의 디스토피아에서 사회주의자에 대한 미국 특유의 전통적 거부감마저 벗어던짐. 오늘날 미국 새천년 세대의 30% 이상이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미국 유권자 전체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노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추세로 전환됨. 더 이상 미국은 레이건 보수주의 시대 “노동 때리기” 담론이 지배했던 그 시대정신의 미국이 아님.
- 과거 68혁명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일시적 바람인 줄 알았음. 파리 학생들의 점거 사태로 촉발된 이 혁명의 화염은 유럽은 물론 미국으로 옮겨 붙음. 스페인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이어진 오쿠파이 운동은 바로 이 68혁명의 부활로 이해되어야 함. 최근 스탠리 그린버그는 『상승하는 미국』에서 오늘날 진보주의 흐름을 과거 근대 초기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 혁신주의 시대라고도 불림) 개혁 운동의 부활로 분석한 바 있음.
- 하지만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흐름은 더 정확하게는 새로운 차원의 68혁명으로의 진입이라 할 수 있음. 과거 68혁명은 미국을 근대 진보주의 시대 이후 이 시대의 질식할 것 같은 규율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미국을 탈근대적 사회로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근대의 진보주의는 그 어휘(progressivism)의 뉘앙스 때문에 자칫 좌파적 흐름으로만 핵심을 오해할 수 있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카오스를 정돈하고 새로운 규율을 만드는 근대적 질서의 창출임. 이 시기의 핵심적 성취 중 하나가 근대적 협회의 구축임. 이 협회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 규율과 규정 속에서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감. 가령 의사협회 덕분에 우리는 무자격 시술자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한편으로 이 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식으로 사회 구성원 간에 안정된 질서를 구축함.
- 반면에 68혁명의 핵심은 질서의 ‘파괴적 혁신’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자유의 혁명은 이후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하나인 인터넷 혁명을 촉발시켰고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웠음.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쿠파이 월스트리트는 근대 진보주의 시대의 안정성 구축과 달리, 기존 자본 시스템 전체를 파괴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과거 68혁명이 공장에서의 규율에 대한 반발이라면 지금의 새로운 68혁명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공장을 넘어 전 사회가 기업국가로 고착된 경향에 대한 반발임. 단지 공장주와 정부에 대한 저항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함.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쿠파이 혁명은 68혁명이 인터넷에서 시작한 공유자본주의 혁명을 더

육 가속화할 상상력을 낳고 빌 게이츠 및 벤처 기업가들 중 ‘공화주의적 자본가 계급’을 새 주체로 만들어내고 있음. 인터넷이 국방성 발명 이전에 이 68혁명의 아이라면 오큐파이 혁명의 아이는 인터넷이 진화한 공유경제임. 오늘날 우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근대적인 하드웨어를 소유하기보다는 매개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자본주의가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레임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부활은 혁신 기업의 가치를 알아본 정부의 협력 체제에서도 기인함. 예를 들어 중앙일보 2016년 4월 18일자 이철호 기자의 지적처럼 그토록 실패를 권장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머스크는 무모한 도전으로 부단한 파산 위기에 직면한 바 있음.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자 머스크는 구글에 테슬라 인수를 요청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리기도 함. 오바마의 기업 구제 조치들은 오늘날 티파티와 샌더스 현상 등 반발을 낳았지만 이때 미래를 생각하며 5500억 원 구제금융을 오바마 정부가 긴급 투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테슬라는 없음. 결국 머스크는 4년 만에 구제금융을 다 갚고 오늘날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며 미국 경제 부활의 선두에 서 있음. 오늘날 미국의 부활은 이 미래 기업과 오바마 정부의 혁신적 연합에 기인함. 지금 몰락의 위기감 앞에서 떨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과 비교할 때 혁신적 국가의 리더십과 새로운 상상력의 자본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함.
- 이 새로운 68혁명의 시대와 가치혁신의 중심에 도시가 있음. 페이스북, 구글 등 혁신 기업들은 다양한 이민자들과 새천년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상상력의 보물섬이자 매력적 문화 공간이기에 도시에 주목함. 창조도시라 불리는 뉴욕 인구의 40%가 해외 이민자 출신이고 시애틀 등의 매력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개방성을 보여줌. 지금의 시기를 단지 경제적 차원의 진보주의 시대로 이해하면 협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오늘날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만큼 이 도시 재생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미래 경향성의 중심에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놓여있음. 2015년 갤럽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60~70%의 시민들이 게이와 레즈비언, 혼외 출산, 결혼 전 성관계 등에 대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실 이러한 조사는 이미 수년간 다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사회적 운동과 선도적 지식인들의 움직임, 새천년 세대의 등장, 그리고 대중문화의 복합적 작용과 누적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에 불과함. 오늘날 전통적 가톨릭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황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 발언은 과거만큼 논란이 되지 않음. 심지어 보수적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대법원마저 대법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에 합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미 미국 지형이 바뀌었음.

- 비전과 가치의 수립을 위해 동성애 수용과 더불어 가족 관계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싱글 여성 등 새로운 인구집단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임. 2016년 레베카 트레이스터(Rebecca Traister)는 싱글 여성이 결혼 여성의 비율을 앞지른 추세는 더 이상 이들이 비주류가 아니라 향후 미국 경제, 정치 지형의 주역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함. 이제 이 싱글 여성 등이 주도하는 미국 내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유급 휴가나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자는 아래로부터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 직장에 나가야 하는 곤혹스러움임. 민주당 전략 사이트 (thedemocraticstrategist.org)의 2016년 1월 29일 글에 따르면 진보의 아성인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2006년부터 유급 병가를 시행해 왔는데 오늘날 이는 23개 시 및 주에서 법률로 작동하고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에게 의무화함. 또한 뉴욕타임즈 2016년 1월 10일자에 따르면 싱글 남성보다 싱글 여성이 홀로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4배나 더 높음. 이들 싱글 여성에게는 유급 병가나 휴가는 물론이고 기본 소득은 가족을 부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음. 물론 싱글 여성만이 아니라 가사를 돌보는 여성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남편의 자의적 지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앞으로 싱글 여성의 삶의 조건, 일인 가구 등의 새로운 현상에 누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해 질 것임. 우선 그들과의 삶의 공감 및 적극적 임파워링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견지에서 보면 왜 베이비 붐 세대의 힐러리 의원이 21세기 보다 진보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대담한 아젠다를 내건 샌더스에게 고전을 치렀는지 쉽게 이해가 됨. 힐러리 의원은 오늘날 젊은 싱글 여성, 새천년 세대 등의 삶의 조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짐. 샌더스 열풍은 이제 레이건 시대에 적응하고 나서 그 시대 자장 속에서 중도적으로 개혁했던 클린턴 시대를 넘어 동일 임금, 유급 휴가, 기본 소득 등에 대한 진일보된 조치로 나아가는 정치질서를 의미함.
- 가족 관계의 큰 변화와 더불어 보수주의 미국의 국가 기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주제는 종교의 퇴조임. 과거 제레미 리프킨이 미국문명의 퇴조를 단언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근본주의임. 그는 『유러피안 드림』에서 갈수록 세속화되는 유럽에 비해 미국은 세속적이지 않고 절대적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역동적인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단언함. 그런데 미국조차도 세속주의자가 주류 기독교인 수를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저명한 사회학자인 퍼트남(Putnam)은 2013년 출간된 『아메리칸 그레이스』에서 오늘날 미국인에게 종교는 친교와 공동체 형성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고 엄격한 교리 전파

- 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새천년 세대 등에서 종교 간 결혼의 증가 등 친교를 통한 다양성과 관용이 증가하는 추세는 리프킨이 기억하는 절대주의 교리의 미국이 아님.
- 물론 이러한 세속화의 추세가 곧 영성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한편으로는 세속화, 과학화가 진행되면서도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음. 오늘날 현존하는 위대한 자인 교황의 메시지가 미국 사회를 흔든 현상은 이 영성의 부활과 맥이 닿아 있음. 그가 2016년 발표한 생태회칙은 기존 인간 중심적 구원 교리와 달리 우주 속에서 신성한 인간의 위치 및 우주적 친교,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기술주의를 넘어선 생태적 시야라는 놀라운 사유를 선보임. 그는 또한 미국 의회를 방문한 연설에서 미국 정신에 면면히 흐르는 심오한 영적 각성의 배경을 자세히 언급하여 미국 지성계를 놀라게 함. 오늘날 미국에서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어려움.
 - 오늘날 새로운 문명의 흐름으로 또한 주목할 점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갈망의 증대임. 미국은 지금까지 빅맥으로 상징되는 '패스트 푸드 국가'로 악명 높음. 하지만 아이오아 디 모인 레지스터 지의 2016년 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컨설팅 업체의 전국 조사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음. 이에 따르면 45%의 응답자가 그들의 가장 최우선 관심이 건강한 음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음식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리고 75%의 압도적 응답자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촉진시킬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더 나아가 나눔문화(내 밥상의 GMO)에 따르면 GMO 종주국이자 몬산토의 근거지인 미국의 20개 주 이상에서 의무 표시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음.
 - 오늘날 새로운 가치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의 재구축임. 과거 베이비부머들의 꿈은 SUV(야외활동에 적합한 다목적 차량) 자동차와 교외의 넓은 저택이었음. 하지만 오늘날 새천년 세대들을 주축으로 다시 대도시로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 새천년 세대 대학 졸업자 가운데 3분의 2는 교외지역에서 사는 것을 싫어함. 이들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대도시에서 정착을 하고, 자신들의 DNA로 도시의 모습을 변모시켜 가고 있음.
 - 더구나 도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지역 농업과 괴리된 긴 탄소 발자국의 비인간적 공간이 아님. 로컬 생산자와 결합된 도시의 식당과 도시 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고 있음. 시애틀, 포틀랜드 등이 유행시킨 에이스 호텔은 이 새로운 문명의 감수성을 잘 반영함. 농촌도 더 이상 과거 근대산업주의의 미국이 아님. 파리기후 변화 협정 타결

및 오바마 정부의 가속화한 생태적 규제 방향으로 아이오아 등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이 매력적인 도시는 가족주의와 종교적 절대주의의 청교도 시대로부터 벗어남은 물론이고 삶의 재미와 다양한 쾌락의 원천에 대한 자유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 한때 미국은 금욕주의의 나라로서 술을 규제하는 기이한 시절이 있었음.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한 이 금주법은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중앙정부의 과대 성장을 도왔다고 한함. 오늘날 미국에서 새로운 금주법 투쟁에 해당되는 이슈는 마리화나 전쟁임. 사실 그간 범죄와의 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마리화나는 오늘날 혁명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 혁신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음. 마리화나 산업의 선구자인 크리스티안 하게세스(Christian Hageseth)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오레곤 주 등 이미 2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마리화나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그리고 2016년에는 6개 주가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연방법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리화나 혁명의 추세는 곧 주와 연방 차원의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마리화나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 의학적 용도로서의 정당성 및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한 오락거리로서는 물론이고 경제가 퇴조해가는 지역에서는 산업으로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임. 연방 차원의 법 제정 움직임의 시작과 동시에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대자본들도 준비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은 과거 민주당 2008년 집권 아젠다인 <플랜>과는 사뭇 다른 시대정신과 가치를 드러냄. 강력한 돌풍으로 등장했던 샌더스 현상으로 힐러리 의원은 오바마의 점진주의적 진보 노선과 급진주의 태도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임. 그녀는 대학생 학자금 정책, 최저임금, TPP 등에서 보다 좌파적 입장으로 선회함.
- 힐러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20012년 오바마가 큰 성공을 거둔 미래로의 진전(Forward) 대 과거로의 복귀라는 대립구도로 반동적인 트럼프 현상을 누르고자함.
- 힐러리는 오늘날 미국의 시대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오바마의 점진주의 노선을 계승하여 생태적 혁신, 노동 권리 강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월가 규제 강화, 이민법 개혁, 범죄와의 전쟁의 강경 기조 완화, 총기 규제 강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평생교육 투자, 유아 교육 단계에서 불평등 해소, 소수자 권리 강화, 지구적 제국 질서 안정적 구축 등을 추구할 것임
- 보다 진보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권 후 다시 오바마적

점진주의로 복귀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샌더스 지지기반과 부단한 갈등을 겪을 것임. 오늘날 시대정신이 인사이드에 대한 거부와 아웃사이드들의 반란이란 점에서 점진주의적 아젠다와 태도를 가진 정치세력들은 당분간 집권과 거버넌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 캠페인은 더욱 시적으로 해야만 집권하고 거버넌스는 더욱 산문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격차 속에서 오늘날 수권을 추구하는 정치세력들은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의 어려움에 처해있음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에서도 이번 총선의 뜻밖의 기적처럼 기존 교과서와 정치평론의 예측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임
-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그간 두 국가를 작동시켜온 집단적 꿈의 퇴색임.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자수성가의 나라임. 즉 이민자로서나 혹은 젯더미 위에서 새로이 출발한 국가로서 언제나 더 나은 미래로의 역동성이 살아있다는 공통점을 가짐. 미국 영화 ‘파 앤 어웨이’나 한국영화 ‘국제시장’은 모두 다 힘겹게 부동산과 사업을 일군 이 자수성가 DNA에 대한 증언임. 어쩌면 두 나라 모두 좌파가 그간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 잔혹한 탄압만이 아니라 바로 이 계층 상승의 꿈, 혹은 포로이기 때문임.
- 미국 백인 중년의 충격적 사망률 증가를 증언한 앵거스 디틴 교수는 마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건 당신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일갈했던 것처럼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과 같은 예외 국가에 해당된다고 뼈아픈 지적을 함. 그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도 17년만에 거의 두배로 뛰었음(95년 6.9%에서 2012년 12.2%). 미국이 95년 13.5%에서 2012년 18.9%로 급격한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훨씬 더 가파른 변화임(조선일보 2016/05/18). 이런 극단적 불평등, 미래 희망의 상실은 극단적 분노를 낳음, 누군가는 심판하거나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전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 이미 여성 혐오 등이 두드러진 일베 운동은 한국판 트럼프 현상임.
- 과거 로버트 라이시가 2020년 대선에서 참주선동가가 당선된다고 예언하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 지식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함. 다투어 트럼프 현상의 배후에 대해 사회학적 심층 분석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예측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을 늘어놓았음. 미국 실용주의의 힘은 이 자기성찰과 부단한 이론의 재구성임.

-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지식인들의 반응임. 자신들의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생긴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의 스토리텔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임. 더 놀라운 점은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 경이로운 총선 결과를 보고나서도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 애써 과소평가하느라 분주하다는 사실임.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단지 중도화의 성공으로만 제한해서 평가하는 경향은 이미 총선 전에 보인 선거 혁명의 징후를 애써 외면한 분석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필리버스터 현상에 대해 아직도 그 의의가 충분히 분석되고 있지 않음.
- 왜 새천년 세대들은 이 자유의 이슈에 이토록 민감한걸까를 생각할 필요. 과거 세대와 달리 그들에게 자유와 삶의 안정성의 가치는 미래 행복의 핵심 조건임. 경희대학과 경희사이버대학에서 수천명의 청년기 및 다양 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꿈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행복이 등장하고 자아실현, 자유, 정신적 스승, 우정 등 과거 개발주의 시대와는 다른 느낌의 가치들이 등장함.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는 미국과 같은 정도의 파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치를 가진 이 새천년 세대 및 각성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 놀라운 기적을 행사할 수 있음.
- 이 아메리칸 드림과 코리안 드림의 실패 속에서 기존 보수의 가치와 세력은 지금 황혼기에 접어들었음. 한겨레 5월 10일자 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 보수의 황혼기는 더욱 절망적임. 거제(조선)에서 평택(전자)에 이르기까지 기존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주의 발전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음. 미국의 쥘 부시 등 기존 보수 정객들은 이 황혼기 스산함을 넘어서는 미래 보수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좌절함. 보수 풀뿌리 유권자들은 차라리 트럼프 등 기업가 출신에게 위대한 보수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음. 김무성 등 한국의 기존 보수 대선 주자도 '헬조선'을 넘어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함. 보수 유권자들은 지금 리더를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기존의 극단적 보수 정당의 뿌리와 사뭇 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안철수 의원 주변까지 기웃거리고 있음.
- 한국은 오바마나 샌더스의 시대가 오기에는 분단 현실과 저성장 국면에서 더 어렵고 복잡한 한국적 특징을 가짐
- 특히 기존 발전 국가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하고 4차 산업 혁명이 광속으로 전 지구를 휘감기에 기존 IMF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 교과서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음
- 굳이 미국에 비유하자면 한국은 68년 낡은 민주화 운동 패러다임 및 내부 분열의 시대(기

존 뉴딜 민주주의자 험프리, 새 정치론 맥카시, 신진보주의자 바비 케네디 등) 대 노회한
닉슨주의 보수의 대결 시대에 더 가까움. 이 틈새를 파고들 한국판 ‘초당적 아이젠하워’나
‘개혁적 보수주의자 존 맥케인’이 등장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의 소위 리버럴 정치세력들은 필리버스터와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혁명으로까지 이해
하지 못하고 새로운 코리안 드림에 대한 유권자들의 간절한 꿈을 저버린다면 결코 이들에
게는 기회가 오지 않음. 지금 민심은 혁명을 예고하고 있음. 이들은 자유와 삶의 행복, 그
리고 미래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음. 더구나 집단적으로 동시에
공유된 학습인 알파고 사태는 더욱 다가올 미래에서 자신의 위치가 없다는 절실한 자각을
몸에 새김. 지금 전환기 한국 사회는 대담한 미래를 열어갈 구원자를 갈구하고 있기에 누
가 이를 포착하는 가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임.
-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큰 전환기의 특성을 가지기에 기존 교
과서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점과 유권자들은 기존 인사이드에 대한 분노 속에서 급
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임. 단 이 태도가 곧 보다 좌파적 이념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과거 무상급식 등이 좌파적 아젠다가 아닌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대의 모순에
대한 감각과 대담한 도전자 태도가 핵심임.

〈강령 구성 과정에 대한 제언〉

- 이러한 전환기에 강령은 먼저 변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꿈과 절망감, 가치와 태도, 대중
감정(public sentiment, not public opinion)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에서 출발할 필요성
- 새로운 시대정신과 꿈, 스토리텔링을 녹이지 않은 강령은 감동적 힘을 가지는 메시지로
전환하기 어려움
- 강령 작성 자체보다 야권이 강령을 만들어가는 과정, 강령과 구체적 당면 이슈를 연결하려
는 태도, 가치와 강령과 구체적 아젠다 및 메시지 전략과 교육 등의 연결 등이 훨씬 더
중요함. 자신의 것으로 실천한만큼이 자기 강령임. 미국의 강점은 연방주의라는 실험주의
가 가능한 조건에서 강령의 구성 과정이 매우 역동적(Lean Innovation)이고 구체와 추상
이 잘 결합됨. 연방주의적 조건은 부재하지만 가급적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작은 실험 및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 이론화하고 확산 및 대담하게 강령에 반영하는 노력을 수행해야함.
강령 제작의 과정에 지자체 리더들이 협력하고 크게 기여하게 해야함.

- 야권의 “미래 리포트”를 야권 지지자들과 아래로부터 함께 작성해나가는 과정이 곧 강령 구성의 역동적 과정이 되어야 함. 21세기에는 이 상호작용, 시민 개입주의(civic engagement)가 정치의 핵심임.
- 대선 후보들은 위 토대 위에서 각자의 꿈과 비전을 경쟁적으로 만들어가고 이후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선출 전당 대회에서 당의 대선 강령이 최종 확정되어야 함
- 위 과정 속에서 확정된 강령은 지지자 그룹의 생생한 메시지로 전환되어 풀뿌리까지 작동해야함
- 아울러 문자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동영상의 시대에는 강령 작성 과정과 메시지 전략이 새천년 세대 중심으로 21세기형 퍼포먼스로 만들어져야 함.
- 미국 리버럴 진영이 오늘날 탁월한 점은 정보 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환경 속에서 빅 데이터 분석과 온/오프 스토리텔링 수집의 선순환 피드백(수백만의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투표 독려 활동과 본부의 데이터 통합), 가치와 이슈의 결합, 정교한 정책과 이의 새천년 세대에 게 소구할 메시지화의 결합 등에서임. 원래 이 점에서 공화당은 자본의 우위 속에서 수십 년간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임. 하지만 2008년을 거치며 미국은 리버럴 진영이 과학적 선거라는 점에서 공화당 진영을 완전히 압도함. 오바마는 이 점에서 미국 리버럴 진영의 혁신에 큰 기여를 함. 최근 킵그리치 하원의장 등 전통적 공화당 전략통들이 이제 와서 리버럴들의 시도를 모방하려고 움직이는 현실이 흥미로움.
-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 및 야권이 이번 대선에서는 시대정신에 대한 겸손한 이해 노력, 과거와 차원이 다른 가치 전략 및 강령 구성의 과정을 가지고 이는 곧 집권 후 국정운영의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함. 다가오는 디스토피아를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음.

발제 2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윤탈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왜 가치와 비전이 중요한가

- 크고 멀리 보아야 한다. 정당은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을 중시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슈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일관된 가치와 체계적 철학은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이해 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정당의 가치와 비전은 대중의 지지의 근거가 되는 대의명분이며, 일관되며 효과적인 메시지 생산에 필수적 요소이다.
- 서구의 주요 민주진보 정당들은 핵심적인 가치와 비전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 등 연이은 선거 패배 속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은 오바마케어, 최저임금 인상, 동성결혼 합법화 등 시대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쟁점화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민주진보 정당이 지켜낸 가치는 암울한 군사독재 시절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 특히 시민적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 - 로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있었음.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인권과 민주화,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지역주의 극복과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민주정부가 추진한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새롭게 제시해야 함.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어 오늘날 시대적 과제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함.
- 이러한 유산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역동적 경제,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등 세 가지 목표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함. 자유시장, 경쟁, 효율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보수주의 세력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담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진보적 가치와 이념의 재발견이 중요함

2. 과거 민주정부(1998-2008) 평가: 미래를 위한 성찰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국 역사에 커다란 역사적 유산을 남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부패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분명한 사실임. 이후 보수정권들을 거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부패 지수는 크게 악화되었음. 민주진보세력에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면서 민주주의를 강화한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할 수 있음.

김대중 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움. 또한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으며 관치경제의 폐해를 상당부분 극복하는데 성공함.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주춧돌을 세운 것도 커다란 업적임. 노무현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했으며,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음. 행정에서 증거 기반 평가의 토대를 세웠으며, 집권 후반기에는 '비전 2030'을 통해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주정부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의 실망감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이러한 실망감은 민주진보세력의 집권에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함.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 한 점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지점임(김윤태, 2015b).
- 민주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양산됨. 전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약 25%로 상승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년 중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도 약 25%로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임(OECD, 2013). 또한 민주정부 집권 기간 동안 영세 자영업이 증가했음. 한국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약 30%로 상승함. 내부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탈락한 중고령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몰려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대다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로 5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불안정함
- 한국의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음(김윤태·서재욱, 2013).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음.

- 한국의 불평등을 연구한 김낙년 교수는 최근 경제개혁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한국의 지니계수가 .30에서 .37로 악화되었고, 소득 상위 1%가 점유하는 소득의 비중이 6~7%에서 11~12%로 증가했다고 주장.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율은 10배에서 20배 이상으로 확대됨(김낙년, 2016). 김낙년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증가 원인을 ①성장의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②성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③고소득자의 한계세율이 인하된 데서 찾음. 특히 민주정부 집권기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고 조세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은 뼈아프게 성찰할 지점임.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한계세율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 후반에 70%로 정점에 달했지만, 점점 낮아져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40%로 낮아졌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35%로 더 낮아짐(김낙년, 2016)
- 이처럼 민주정부 집권 기간에 도리어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민주정부의 정치적 강령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의 개발독재와 관치경제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새로운 국정목표로 내세움.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함. 민주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생각했지만, 당시 민주정부는 관치경제의 극복, 지역주의 해소, 4대 개혁입법 실현, 보수 언론과의 대결 등을 최대 현안으로 상정함
- 당시 민주정부는 자유시장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자유화, 사영화, 탈규제화, 금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민주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쟁, 효율성, 선택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자유시장 접근법에 치우침. 반면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과소평가했음. 당시 민주정부는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 정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복지제도를 확충하였지만, 선제적이고 장기적 국가 전략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인 대책에 머무름(김윤태, 2012).
-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집권 2년차 중반이고,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이정표가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집권 3년차 후반이었음. 이 시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5.3%로 김영삼 정부 시기(3.3%)에 비해 증가했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에 대응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 했음(김윤태, 2009)

-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었음. 정치적 담론에서 핵심적 가치(사회정의와 연대성)를 표현하는 정치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어려웠음.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했으나,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로 축소하여 해석한 반면,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로 확대 평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 ‘2만 달러 시대’를 주장하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동반성장’을 주장. 미국에 할 말 하는 ‘자주외교’를 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요청대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 부동산 인상을 예상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의 시기를 놓쳐 결국 부동산 급등을 제대로 막지 못했음.
-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12대 국정과제의 하위 항목으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다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야 ‘비전 2030’을 내세우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가 한국의 나아갈 길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음.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비전 2030’을 뒷받침하는 보육정책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정책이 입안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함.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 너무 늦었음.
- 결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복지국가의 뼈대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를 막지도 못 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정치적 지지로 이끌어 내지도 못 함. 이러한 경험은 민주정부가 **집권 이 전부터** 국민의 체감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정당의 강령에 **일관성**이 있는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3. 유럽 민주진보 정당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990년대 이후 유럽 민주진보정당들은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실험했으며, 이는 강령과 정책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현재까지도 유럽 민주진보정당의 당내 논쟁은 제3의 길의 유산을 두고 벌어지고 있음(김운태, 2012).

특히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의 재정균형, 자유무역, 복지개혁을 수용한 ‘제3의 길’

정치의 등장 이후 1997년 블레어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1998년 독일 사민당 슈뢰더의 ‘신중도(Neue Mitt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3의 길 정치가 관심을 끌었음.

- 주지하다시피 ‘제3의 길’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자 했으며, 전통적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구분을 뛰어넘는 **중도노선**을 지향했음. 기회의 평등,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를 모두 강조했음. 자유와 평등, 책임과 권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둘러싼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을 절충과 타협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음(김운태, 2012)
- ‘제3의 길’ 노선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먼저 제3의 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지속적인 경제 호황, 고용 확대, 공공 투자의 증가, 아동과 노인 빈곤의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2007-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3의 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늘어났음.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영국 노동당의 코빈,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는 모두 ‘제3의 길’을 지지한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많은 인기를 얻음. 이들은 제3의 길의 금융 자본주의의 강화, 불평등의 확대, 복지의 약화와 노동계급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함
- 다른 한편, ‘제3의 길’ 노선을 선택한 민주진보 정당들이 지구화와 경제 자유화를 지지한 결과, 이민이 급증하여 국내 노동계급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극우 포퓰리즘의 주장이 전통적인 민주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었던 저숙련 노동계급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사실 ‘제3의 길’은 지구화의 부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세계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시장의 역동성과 자유 무역 및 이민개방의 장점을 비대칭적으로 강조하여 시장경쟁의 약자인 노동계급과 취약집단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 한 결과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함
- 또한 제3의 길 노선은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데 실패했음.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제3의 길 정치가 보수

적 우파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음. 일관성이 있는 가치와 정당성을 담아내는 메시지를 생산하지 못 한 채 정치경제적 해법만 찾으려는 피상적인 실용주의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불평등의 확대를 용인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조건부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은 실패했음 (이에 독일 사민당의 근본가치위원회는 수년째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좋은 사회’라는 가치를 제시했는데, 먼저 ‘좋은 사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정치적 경로를 구상하려고 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 노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님. 최근 유럽연합(EU)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연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음. 오랫동안 ‘제3의 길’에 비판적이었던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도 위와 같은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이제 유럽의 중도보수주의 정당들은 대부분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 개인의 자유와 사회복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영국 보수당, 독일 기독교민주당과 스웨덴의 온건당 모두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함. ‘제3의 길’은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음
- 제3의 길 노선이 국가마다 상이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영미권 국가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급증한데 비해,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제3의 길’을 채택한 후에도 가장 높은 경제 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보편적 교육,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고용정책, 노사의 탄탄한 협력 체제라는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함(김윤태, 2012)
- 북유럽 국가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정당들의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세력 사이의 연대의식이 높음.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보육, 양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에 투자하고 사회서비스 부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양성 평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과 평등을 강화하는 사회정책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신뢰를 높이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매우 연대성이 높은 사회를 유지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정치’의 경험은 한국의 진보세력에 대해서도 유용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페트링, 2012).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함. 특히 많은 성과를 이룩한 북유럽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함. 빈곤층을 위한 현금 급여보다 교육과 훈련을 투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빈곤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보편적 원칙에 따른 사회보험(보건, 고용 등)이 불평등을 축소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동시에 보편적 보육, 요양, 아동지원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강화했음. 결국 고용정책, 복지정책, 가족정책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음

- 튼튼한 복지국가는 경기변동과 기술변화에 따른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킴.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주자 등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함.

4.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평가

-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그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을 그대로 계승했음. 이 강령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치면서 계속 변화했지만, 강령의 제정에 대하여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논쟁의 과정 중에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떨어짐. 강령의 경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전파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시민들에게 정당의 지향점을 각인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치와 이념에 근거한 강령을 토대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선거 기간에 급조된 공약을 산발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의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호소력 있는 메시지의 전달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함
- 2010년 이후 전 지구적인 시대정신은 소득 불평등의 적극적 완화, 근로빈곤의 근절과 최저소득의 보장, 이민자와 소수자의 사회통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1980년대 확산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추진한 경제 자유화, 탈규제, 감세, 복지 축소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적 위험이 증가했음.

- 세계경제포럼은 ‘소득 불평등’을 세계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World Economic Forum, 2014).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나친 불평등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과거 탈규제, 감세, 사영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던 국제통화기금도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IMF, 2014). 실제 소득 하위 20%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됨
- 최근 독일, 영국 등에서 근로빈곤의 근절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생활임금의 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음. 증가하는 이민·난민 인구에 대한 사회통합도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세 가지가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강령은 안보와 북한 인권, 환경에 대한 강조와 원자력 반대 등에 대한 전향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삭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등 그 이전 개정된 강령보다 퇴행적 결과를 가져와 심각한 우려가 커졌음.

1) 경제

- 먼저, 이전 강령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 확립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임. 권력의 분산, 권력기구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 확립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는 타당함. 그러나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음
-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임.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케티, 스티글리츠 등 경제학자 뿐 아니라 기업인 출신 빌 게이츠까지도 동의하는 지점임(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빌 게이츠는 소비에 대한 누진세를 주장)

-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서는 조세와 관련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정도 미온적인 방안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보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도 ‘증세 없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지만, 집권 4년 차인 올해까지도 별 성과가 없음. 정교한 조세정책이 없다면 복지확대, 미래성장동력, 과학기술투자 등 구체적 정책 수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임.
-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절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증세 없이는 뚜렷한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강령은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복지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어렵게 할 것임. 복지확대를 기대한 유권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2) 복지

- 2013년 강령에서 옳게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임. 모든 복지국가는 광범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와 자산조사를 거친 선별적 복지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예방적인 복지정책인 사회보험, 인구학적 수당(demogrant), 교육·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때 사후적인 소득보장인 공적부조 또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임
- 같은 맥락에서 ‘복지사각지대’는 빈곤하지만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인구 뿐 아니라 복지에 대한 욕구(need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중산층 이상 인구까지 포함해야 함. 주관적 계층의식 조사에서 스스로 하위계층으로 여기는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현실임(강원택 외, 2014)

- 복지예산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기조의 후퇴는 하위 정책목표인 ‘균등한 기회와 존엄한 노후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건강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임

3) 일자리, 노동

-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일자리·노동과 관련하여 “안정적 노동환경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겠다는 입장임. 구체적인 목표와 적정화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근로빈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혁신적 경제성장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임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임. 최저임금 인상도 임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이해되어야 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강령 내용은 없음. 최근 미국, 유럽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고, 2016년 한국 총선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공약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이 의제가 강령에 반영되어야 함.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함.
- 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강령 내용이 단 한 줄(“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민의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주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에 그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임.

5.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망

-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이 내놓는 모든 메시지가 일관성 있는 가치와 체계적인 철학을 밑바탕으로 해야 함
- 영국 노동당이 3연속 패배 후 1994년 ‘사회정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 복지’라는 새

로운 비전과 가치 제시. 미국에서는 공공정책연구소(PPI)가 등장하여 ‘제3의 길’을 제창하였으며,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는 시기에 미국진보센터(CAP)가 등장하여 새로운 진보 노선 모색. 독일 사민당도 선거 이후 ‘근본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슈뢰더의 ‘신중도’에 대한 재평가 시도. 그러나 한국은 대선 패배 이후에 가치와 비전에 대한 재검토보다 선거에 대한 피상적, 당파적 평가가 난무했음.

-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인터넷 개인 방송, SNS 활용은 홍보의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가치(value)의 공유’임. 정치인과 정당이 효과적으로 대중을 참여를 유발하는 힘은 바로 가치에 호소하는 효과적인 메시지임.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가치와 메시지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는 평등과 사회정의, 포용적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를 들 수 있음(김윤태, 2014)

1) 평등과 정의

- 먼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지나친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에 생산성 감소, 효율성 감소, 성장 둔화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경고함(Stiglitz, 2013).
- 기회의 평등(교육, 의료 등)과 결과의 평등(소득, 주거 등)을 모두 추구해야 하며, 이는 기회와 결과 모두에 있어 지나친 불평등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결국 평등에 대한 논의는 ‘정의로운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짐
-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함. 공리주의의 이념을 반영한 ‘파레토 최적’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진된다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공리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분배의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겨두었음. 부자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를 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된다면 재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임

- 공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며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불평등이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하층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함(Rawls, 1971).
-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은 공리주의가 오직 효용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결과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함. 예를 들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공중도덕과 전통예절 등 공동체에서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도 효용을 극대화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음. 또한 사회 전체의 효용이란 구실은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Sen, 1999). 동시에 센은 롤스가 정의에 대한 논의를 주로 소득의 분배에 국한시켜 전개했다는 점을 비판함. 사회 환경(교육시설, 의료시설, 노동시장 등)과 개인적 특성(성별, 장애, 연령, 건강 등)에 따라 동등한 소득은 사실상 차이를 가지게 됨(Sen, 1999). 센은 소득을 역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강조했음. ‘역량’이란 잠재된 가능성과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센은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중시했음.
- 모든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사회의 최하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평등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직장을 2-3번 옮기더라도 고용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인의 능력을 키우며, 빈곤에 반복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임

2) 포용적 민주주의

- 다음으로 포용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처럼 공동체에 중요한 이슈들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회의감에서 비롯하며, 이를 방지하면 대의 민주주의는 ‘위임 민주주의’로 변화되어 소수의 정치계급이 다수의 대중을 통치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음

- 21세기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집단지능을 활용하는 대중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시민정치'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음. 새로운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야 함.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주변적 집단과 개인들까지 포용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적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부와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은 중요함. 먼저 행정부는 정보공개법 제정과 행정조직의 개혁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 제도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협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도가 필요함.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협상하는 전담기구 구성, 주민투표, 시민배심원 제도, 공론조사 등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활용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 참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통합을 확대해야 함

3) 사회적 연대

-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는 퇴행적 보수주의의 시장만능주의와 낡은 사회주의의 국가 통제를 뛰어넘기 위한 가치임. 경제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사상적 조류와 낡은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사상적 조류를 모두 반대해야 함
- 사회적 연대의 가치는 무엇보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임. 한국 국민은 흩어진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며, 다양하게 연결된 공동체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사회적 연대는 모든 사회 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발전함. 사회적 가치를 외면할 때 이기적 특권, 책임 회피, 무임승차가 횡행하게 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사회의 공동체 정신과 상호협력의 시민문화가 강화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함
-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장기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음. 사회적 신뢰에서 성장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갈등의 비용을 축소하고 사회적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먼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봉사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촉진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의 평등과 정의, 포용의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등 주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을 주는 **경제 민주화**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국가**를 추진해야 함.
- 무책임한 보수주의 세력은 경제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감세, 건전재정,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당연하게 간주함. 반면에 전통적인 진보주의는 모든 사람의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평등을 강조.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민주진보세력은 보편적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함
- 모든 시민들이 교육, 재산의 소유, 문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투자가 중요함. 국가는 효과적 재분배 장치의 단순한 작동과 사회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중시해야 함. 국가의 ‘사회투자’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예방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함(김윤태, 2011). 새로운 진보주의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결합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공공투자’의 강화, 산업정책, 과학기술 등 ‘미래 투자’를 강조해야 함.
- 선택적 복지를 통해 최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더 높은 차원의 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함. 산업사회가 만든 사회적 위험인 실직, 산재, 질병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함. 동시에 최근 탈산업사회가 만든 신 사회적 위험인 비정규직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복지 개혁을 추진해야 함. 노동시장에서 실패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함. 빈곤가정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 정책을 강화해야 함. 한부모 가정, 청년 실업자,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절대적 빈곤층 등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함

- 향후 30년 동안 복지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초당적 기구로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고,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함을 설명해야 함

6. 맺음말: 대선을 위한 과제

- 2016년 총선이 새누리 정부 과거 8년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면, 2017년 대선은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투표가 될 것임. 시대정신을 반영한 가치와 비전을 꾸준히 제시하며 미리부터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함. 유권자를 움직일 프레임과 메시지를 선점해야 함
-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은 지지를 받았으나, 박근혜 후보가 두 의제를 수용하면서 차별화가 사라졌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해 의제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했음.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할 후보로서 '신퇴감'을 더 얻은데 비해, 민주당 후보는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과 신뢰가 약화되었음.
-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일관된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한 정당의 현대화와 조직 혁신이 매우 중요함. 중앙당은 전략기획, 미디어 센터, 싱크탱크를 지휘하는 효과적인 선거기구가 되어야 함. 중앙당의 선거전략 수립과 조정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가 있어야 함.
- 첫째, 정당의 근본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정의위원회'와 '근본가치위원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당의 강령, 정책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이념적 토대를 제시하여 일관성이 있는 프레임을 제시해야 함. 특히 자유시장, 경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에 대응하는 가치를 고민해야 함. 칼 폴라니가 강조한 대로 시장 메커니즘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신이 만들거나 자연이 만든 것은 아니다(폴라니, 2009).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또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념으로 홉하우스, 마셜, 롤스, 센의 사회적 자유주의(Gray, 1986.) 또는 군다르 뮐르달, 토마스 메이어의 사회민주주의의 가치(페트링, 2012)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주의 원칙’, T. H.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은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처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해야 함(Marshall and Bottomore, 1992; 김윤태, 2013).

- 민주정책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대선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대선캠프와 자문교수단에 의존하여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1년 전부터 준비된 공약을 토대로 ‘집권 플랜’을 제시해야 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헤리티지재단이 제시한 ‘멘데이트 포 리더십(Mandate for Leadership)’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브루킹스연구소가 제시한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처럼 집권 직후 실행 가능한 정책공약집을 미리 만들어야 함
- 선거전략에서 단순한 ARS 전화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전문가(pollster)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FGI 조사, 패널데이터 조사와 함께 정보분석 전문가(CIO)가 이끄는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이크로 타게팅(micro targeting) 전략을 활용한 정교한 메시지와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사회경제적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보층, 중도층 유권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여권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과 새누리당 심판론으로 집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가치와 비전을 가진 대안정당이자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함. 일관성이 있는 가치와 이념을 갖지 못한 정당만이 집권 후에도 신속하게 체계적인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원택 외.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21세기북스
- 김낙년. 2016.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경제개혁연대 주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발제문
- 김윤태. 2015a.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집문당.
- _____. 2015b. “한국 사회의 불평등 담론”, 이정우, 이창곤 엮음,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 _____. 2014.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전략”,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새로운 정치를 찾아서』, 한울, pp. 13-63.
- _____. 2013.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 201』 16(1): 5-32.
- _____. 2012.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제3의 길 정치’의 결과.”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편.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 _____. 2011.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다양성.” 『사회와이론』 16집: 241-270.
- 김윤태·서재욱. 2013.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
- 알렉산더 페트리. 2012.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한울
- 칼 폴라니, 『위대한 전환』, 길, 2009.
- Gray, John. 1986. *Liber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rshall, T. H. and T.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 IMF.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Staff Discussion Notes* No. 14/2
- OECD. 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Rawls, John. 2003(1971). *A Theory of Justice*. 『정의론』. 이학사
- Sen, A. 1992(1999b). *Inequality Reexamined*.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
- Stiglitz, Joseph.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 World Economic Forum. 2014.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5”.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1. 총평

- 왜 불과 4개월 만에 강령을 개정해야 하는가? 강령 개정의 배경과 취지가 불명확.
- 2016년 강령의 성격: 망라주의와 모범답안. 개념 차원에서 2013년 강령(선순환 경제/ 보편적 복지국가/ 공정경제 등등)보다 후퇴.
- 강령 전문을 마련하여 당의 비전과 지향을 집약할 필요.
- 최근의 사회경제적 대안 수용에 인색: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기본 소득제도, 미세먼지 등등

2. 가치와 비전: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한 논평

1) 기본 인식에 동의

- 역동적 경제,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등 세 가지 목표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수립.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복지국가의 뼈대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를 막지도 못 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정치적 지지로 이끌어 내지도 못 함. 이는 정당의 강령에 일관성이 있는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2) 각론

- 정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과 정교한 조세정책의 부재.
-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나라 곳곳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

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구체 방안이 없음.

3) 대안

- 메시지의 일관성과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 더불어민주당의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는 평등과 사회정의, 포용적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를 제시.
- 포용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지위와 계보? 대의+참여+심의회?
- 강령과 공약의 체계적인 준비 및 일치의 필요성

3. 비전과 가치: 문명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으로부터의 시사점

1) 트럼프 현상

- 문명 전환기의 투쟁. 트럼프나 그를 주로 지지하는 백인 중년 남성층, 그리고 기존 사회적 보수주의와 패권주의,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은 이 근대문명 초기의 주인이었고 지금 퇴조해가는 백인 문명의 최후 단계에서 나오는 절망적이고 복고적 운동임.
-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엘리트들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적의감이 이들을 묶는 공통의 기반임. 주로 관심은 히스패닉 등 새로운 이민자층 및 국제 무역 협정이 야기한다고 믿는 기존 일자리의 상실, 미래 전망 불투명에 대한 분노임.

2) '생태적 기업국가'

- 미국의 새 주인인 오바마, 힐러리, 그리고 스페이스 x 의 앨런 머스크 회장 등은 근대를 넘어 미국을 미래 기업국가로 진화하고자 하는 상승하는 운동임. 이들은 상승하는 세력인 새천년 세대 및 진보적 백인, 히스패닉 등 문화 인종간 연합의 미래 세력을 대변하며 주인이 되고자 함.

3) 신진보주의 가치와 흐름의 도래?

- 더 나은 삶의 질과 생태 문명을 향한 사회운동의 입법이 도시로부터 연방정부로 확산되는 패턴.

- 새로운 차원의 68혁명으로의 진입↔보수의 황혼기(대위기)

4) 강령 구성 과정에 대한 제언

- 유권자들의 꿈과 절망감, 가치와 태도, 대중 감정(public sentiment, not public opinion)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
- 유권자들은 기존 인사이더에 대한 분노 속에서 급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임. 이 태도가 곧 보다 좌파적 이념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5) 논평

- 강령 작성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새로운 고민: input과 output의 일치. 당원과 대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당 강령 교육 및 논쟁의 필요성.
- 저출산에 따른 현행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대응 시급: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육성)만으로는 미흡.
- 여러 번 반복되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책이 약함.

토론문 2

시대정신의 흐름과 전망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대정신의 흐름과 전망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사회와 시대정신

○ 시대정신의 정의

-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적 경향 혹은 상태
- 동시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시대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
- 해당 시대에 국가의 비전이나 사회적 화두, 또는 시대적 과제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응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 시대정신의 흐름

- 민족국가의 건설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
- 국토분단과 사회분열의 극복
- 경제민주화
- 복지사회(성장과 분배)
-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책임

◎ 민주화 이후 선거슬로건

○ 1987년 대통령선거

- 노태우: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권위주의 청산)

○ 1992년 대통령선거

- 김영삼: 신한국 창조(문민정부, 안정 속 변화)

○ 1997년 대통령선거

- 김대중: 든든해요 김대중, 경제를 살립니다(정권교체, 경륜과 경제)

○ 2002 대통령선거

- 노무현: 새로운 대한민국(세대교체, 참여 민주주의)
- 탈권위주의, 지역주의 극복, 지역균형발전,

○ 2007년 대통령선거

- 이명박: 국민성공시대(국민생활)

○ 2012년 대통령선거

-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25.4%)
- 박근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20.1%), 100% 대한민국
- 안철수: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18.6%)
- 김두관: 내게 힘이 되는 국가, 평등국가(16.2%)
-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4.9%)

◎ 대통령선거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시대적 과제

○ 1997년 대선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두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물가(39.0%) > IMF 위기(26.1%) > 경제성장(10.4%)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물가	463	38.4	39.0	39.0
	고용안정	76	6.3	6.4	45.4
	경제성장	124	10.3	10.4	55.8
	중소기업육성	36	3.0	3.0	58.8
	주택, 부동산	1	.1	.1	58.9
	농촌	13	1.1	1.1	60.0
	지역화합	20	1.7	1.7	61.7
	정권교체	29	2.4	2.4	64.1
	3김청산	11	.9	.9	65.1
	세대교체	14	1.2	1.2	66.2
	IMF위기	310	25.7	26.1	92.3
	부정부패	54	4.5	4.5	96.9
	교통	5	.4	.4	97.3
	정치화합	6	.5	.5	97.8
	교육	7	.6	.6	98.4
	안보	7	.6	.6	99.0
	통일	11	.9	.9	99.9
	기타	1	.1	.1	100.0
	합계	1188	98.4	100.0	
결측	0	19	1.6		
합계		1207	100.0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두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순위
- IMF 위기(24.5%) > 부정부패(12.2%) > 물가(11.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물가	142	11.8	11.9	11.9
	고용안정	117	9.7	9.8	21.8
	경제성장	116	9.6	9.7	31.5
	중소기업육성	75	6.2	6.3	37.8
	주택, 부동산	15	1.2	1.3	39.1
	농촌	26	2.2	2.2	41.3
	지역화합	36	3.0	3.0	44.3
	정권교체	33	2.7	2.8	47.1
	3김청산	9	.7	.8	47.8
	세대교체	18	1.5	1.5	49.3
	IMF위기	291	24.1	24.5	73.8
	부정부패	145	12.0	12.2	86.0
	교통	18	1.5	1.5	87.5
	정치화합	37	3.1	3.1	90.6
	교육	44	3.6	3.7	94.3
	안보	19	1.6	1.6	95.9
	통일	39	3.2	3.3	99.2
	기타	10	.8	.8	100.0
	합계	1190	98.6	100.0	
결측	0	17	1.4		
합계		1207	100.0		

-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금융위기로 역사상 최악의 경제환경이 조성되었고 유권자들 사이에는 IMF 위기의 극복과 물가의 안정에 대한 희구가 높았던 것으로 보임.
- 경제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당시 김대중 후보의 호소가 효과적이었음.
- 경제에 실패한 정권의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

○ 2002년 대선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물가(34.0%) > 고용안전(20.9%) > 경제성장(15.5%)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물가	510	34.0	34.0	34.0
	고용안정	314	20.9	20.9	54.9
	경제성장	233	15.5	15.5	70.5
	중소기업육성	26	1.7	1.7	72.2
	주택/부동산	79	5.3	5.3	77.5
	농어촌	71	4.7	4.7	82.2
	지역화합	85	5.7	5.7	87.9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정권교체	23	1.5	1.5	89.4
3김청산	12	.8	.8	90.2
세대교체	8	.5	.5	90.7
부정부패	76	5.1	5.1	95.8
교통	6	.4	.4	96.2
정치화합	9	.6	.6	96.8
교육	11	.7	.7	97.5
안보	15	1.0	1.0	98.5
통일	8	.5	.5	99.1
기타	14	.9	.9	100.0
합계	1500	100.0	100.0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순위
- 부정부패(23.9%) > 교육(9.6%) > 경제성장(9.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물가	4	.3	.3	.3
고용안정	94	6.3	6.3	6.5
경제성장	137	9.1	9.1	15.7
중소기업육성	28	1.9	1.9	17.5
주택/부동산	119	7.9	7.9	25.5
농어촌	115	7.7	7.7	33.1
지역화합	93	6.2	6.2	39.3
정권교체	17	1.1	1.1	40.5
3김청산	15	1.0	1.0	41.5
세대교체	42	2.8	2.8	44.3
부정부패	359	23.9	23.9	68.2
교통	18	1.2	1.2	69.4
정치화합	72	4.8	4.8	74.2
교육	144	9.6	9.6	83.8
안보	62	4.1	4.1	87.9
통일	120	8.0	8.0	95.9
여성	11	.7	.7	96.7
기타	50	3.3	3.3	100.0
합계	1500	100.0	100.0	

- 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선거가 과거 정치선거에서 경제선거로 이행했음.
- 2002년 대선에서도 물가안정과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과제에 우선했음.
- 2002년 대선에서는 세대교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 제시

○ 2007년 대선

-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 이슈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일자리창출(49.3%) > 부동산 문제(15.3%) > 정치개혁(14.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육	107	8.9	8.9	8.9
	일자리 창출	591	49.3	49.3	58.2
	환경문제	9	.8	.8	58.9
	대북정책	33	2.8	2.8	61.7
	부동산 문제	183	15.3	15.3	76.9
	정치 개혁	168	14.0	14.0	90.9
	재벌개혁	16	1.3	1.3	92.3
	기타	82	6.8	6.8	99.1
	무응답	11	.9	.9	100.0
	합계	1200	100.0	100.0	

- 2007년 대선에서도 경제선거의 행태가 강화되고 있음
-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슈에 강조점을 두었음.
- 2007년 대선에서는 선진화담론을 확산시켰음.

○ 2012년 대선

-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 이슈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일자리창출(27.8%) > 복지문제(27.3%) > 정치개혁(20.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교육	93	7.7	8.0	8.0
	일자리창출	323	26.9	27.8	35.9
	복지문제	317	26.4	27.3	63.2
	환경문제	4	.3	.3	63.5
	대북정책	79	6.6	6.8	70.3
	부동산문제	51	4.2	4.4	74.7
	정치개혁	234	19.5	20.2	94.9
	재벌개혁	59	4.9	5.1	100.0
	합계	1160	96.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2	3.5		
	합계	1202	100.0		

- 2012년 대선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이슈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음.
- 2012년 대선에서는 복지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가치 제기

○ 2015년 설문조사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불평등해소	11.7	7.4	9.5
경제성장 지속	14.3	16.7	15.5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	24.7	37.2	31.0
남북관계	4.2	1.2	2.7
안전한 사회	6.8	12.3	9.6
정치개혁	23.5	11.7	17.6
복지확대	10.1	8.7	9.4
환경문제	1.6	2.0	1.8
양성평등문제	2.0	1.2	1.6
부정부패		0.2	0.1
교육문제	0.2		0.1
군인복지		0.2	0.1
국민단합		0.2	0.1
모름/ 무응답	0.8	1.0	0.9
	.000		

자료: 2015년 12월 한겨레 설문조사

- 현재 선생님의 삶에 있어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고용 및 일자리 불안	17.8	14.7	16.2
출산과 육아 불안	3.0	5.1	4.1
자녀 교육 불안	8.7	8.1	8.4
건강에 대한 불안	11.3	14.7	13.0
빚 등 가계부채 불안	10.9	8.1	9.5
집값, 전세값 상승 등 주거 불안	15.2	13.5	14.3
노후에 대한 불안	30.3	33.5	31.9
정세 불안	0.2		0.1
모름/ 무응답	2.6	2.4	2.5
	.208		

자료: 2015년 한겨레 설문조사

○ 결론을 대신하며

- 물가(IMF 위기) -> 경제성장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부차적인 주제: 부동산문제, 복지문제, 부정부패
- 앞으로 더욱 경제선거의 행태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됨.
- 앞으로 더욱 유권자 가운데 “물질주의적”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1회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